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안)

(오성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7
----------	-----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7 일

제안자 : 오성주, 권영천, 서동예, 이현호, 이광희,
김정호, 민병효, 이종률, 유준열, 정운한
정인혁, 조명호, 김태일, 김학인, 원종성

□ 제안이유

- 2005년 6월30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1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 시킨데 대하여 규탄하고 기초의회의 민의 존중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당리당락의 정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
- 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와 중선구제 즉각 철회.
- 다.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 하고 기초의회의원을 정치판에 끌어 들이는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
- 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락의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경거망동을 규탄.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1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고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이고, 지방의원 유급화라니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락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특위의 이름값조차 못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당리당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정당의 입맛대로 예속시키려는 정치권의 개악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하고 더 이상의 민심이반의 정치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유급화를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는 중선구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을 노골화 시켜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의원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정당공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를 깊이 반성하여 당리당락을 일삼는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우리 이천시의회는 민의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 정착하여 꽃피울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7월 8일 이천시의회의원 일동